

제2회 '금융위인상', 파격 도전이 만든 파격 성과

- 지난 4월 첫 시상식에 이어 두 번째 수상자 선정, 성과 중심 문화 확산 지속
- ①국민성장펀드 운영, ②불법사금융 피해 지원시스템 구축, ③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분석 시스템 개발 등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총 1,800만원 포상

1. '금융위인상' 개요

금융위원회(위원장 : 이억원)는 '26.6.18일(목), 제2회 「금융위인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두 번째 수상의 주인공이 된 직원 3명에게 총 1,8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하였다.

「금융위인상」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4월 제1회 시상식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되고 있다. 제1회 시상 이후 성과 창출 시에 확실한 보상이 따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2회 시상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수상자는 금뿔이상(1,000만원), 은뿔이상(500만원), 동뿔이상(300만원) 각 1명으로, 수상자에게는 금융위원장 표창·포상금과 함께 메달이 수여된다.

※ 금뿔이상·은뿔이상·동뿔이상은 금융위원회 마스코트 '뿔이'의 이름을 활용

포상 대상자 후보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추천과 내부 직원 추천 등을 통해 모집하였으며('26.4.20~5.16.), 내부 인사 4인·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성과의 파급력, 난이도,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포상 대상자 3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특히, 이번 수상자 중 김기태 서기관과 박은경 사무관은 대국민 추천을 통해 포상 대상자 후보로 접수되었다. 이는 국민이 직접 발굴하여 추천한 성과가 수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2. 포상자 주요 공적사항

① 김기태 서기관 : 국민성장펀드 설계부터 집행까지, 성공적 조기 안착

금뿔이상 수상자인 국민성장펀드총괄과 김기태 서기관은 5년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주도하고 초기 집행 실무를 총괄하여,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조기 안착을 견인하였다. 우리 경제의 미래인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초 출범 이후 5개월 만에 12.5조원(16건)의 투자를 승인하는 등 조기에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16건 중 10건이 지방산업으로 지역경제 활력제고에도 역할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발표한 '첨단산업 생태계 기여방안'을 통해 스케일업, M&A지원, 지역전용펀드 등 기존 정책성펀드와 차별화된 펀드구성과 '실패경험도 자산이 되는' 운용사 선정방식을 마련하였다.

② 박은경 사무관 :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구축

은뿔이상 수상자인 가계금융과 박은경 사무관은 '26.3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불법추심 중단, 수사 의뢰, 채무자 대리인 선임, 피해구제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종전에는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법률구조공단·경찰 등 기관별로 처리 절차가 상이하여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웠다. 박은경 사무관은 통합 대응을 위한 전 기관 공통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러한 피해자의 애로를 해소하였다.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26.3.9.) 이후 429명의 피해자가 상담받았으며, 2,391건의 불법추심 중단 요구와 385건의 채무 종결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였다.

③ 한성윤 주무관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시스템 개발

동뿔이상 수상자인 가상자산과 한성윤 주무관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퇴근 후 프로그래밍 지식을 습득하여 가상자산 매매분석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초기, 예산과 인력이 제한적인 상황이었음에도 업무에 대한 열정과 적극성으로 직

접 매매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데이터분석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직원도 조사업무를 손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호가창 재현, 관여율 자동 계산, 혐의거래일람표 자동 생성 등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약 9.32억원의 시스템 개발 예산 절감은 물론, 연 1~2억원 상당의 유지보수 비용까지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직접 만든 시스템을 활용하여 약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를 고발 조치('25.12월)하는 등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였다.

3. 향후 계획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파격 성과에 대한 포상을 통해 도전하는 공무원이 늘고, 도전하는 공무원이 늘수록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며 “「포상 → 도전 → 국민 체감 성과」의 선순환이 금융위원회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 체감 성과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역대 수상자들의 성과를 청사 내 「금융위인전(展)」에 게시하고 있다. 금융위인전은 수상자들을 명예의 전당 형식으로 전시하는 공간으로, ‘파격 도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체의 DNA로 내재화되고 ‘파격 성과’가 금융위원회 혁신 동력의 모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26.7.13일(월)부터 제3회 「금융위인상」 후보에 대한 대국민 추천을 접수하고, 9월 중 제3회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붙임】 포상자 주요 공적사항 세부내용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원태 (02-2100-2780)
		담당자	사무관 임승수 (02-2100-2785) 청년인턴 최희원 (02-2100-2772)

1. 김기태 서기관 : 국민성장펀드 설계부터 집행까지, 성공적 조기 안착

□ 추진배경

- 글로벌 투자전쟁에 대응한 종합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150조원 국민 성장펀드가 올해초 가동 개시 → 조기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필요
 -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국민성장펀드를 처음부터 담당할 실무자로서 초기 집행을 가속화하여 산업생태계 지원과 지방성장, 스케일업 지원이라는 도입취지 달성 필요
 - 또한, 집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생산적 금융의 대표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 보완 필요

□ 주요성과

- ① 출범 직후 메가프로젝트 발표 및 5개월만에 16건, 12.5조원 승인
 - 산업적 파급효과와 국민성장펀드 지원 의의를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별 건의 지원의미를 충분히 설명
 - 지원에 따른 생태계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상생활동 체계화***

* 예: 삼성전자는 2.5조원 저리대출을 승인받고, 협력사를 위한 특례보증프로그램(2,000억원) 마련
- ② **1박 2일 지방설명회(‘26.2월), 국민경제자문회의 합동간담회(‘26.3.26)**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첨단산업생태계 발전방안’ 발표(‘26.4.14)**
 - *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직·간접투자 매년 10조원씩 집행, 스케일업, M&A, 지방전용펀드 등 도입, 심사 시 창업경험 우대 등
- ③ **면책부여(금정과 협조), RWA 규제합리화(은행과 협조)**를 통해 민간도 첨단·생산적 분야로 체질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국민체감효과

- 출범초기부터 전례없는 속도로 성과를 창출 → **첨단산업투자생태계 구축과 지방성장 촉진을 위한 의미있는 정책금융 모델로 평가***
- * ‘26.5.18일, 민관합동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세미나’

2. 박은경 사무관 :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구축

□ 추진배경

-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채무자가 위법·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로 개인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
- 종전 피해구제 제도는 금감원, 경찰, 법률구조공단 등 기관별로 분절화되어 피해자가 스스로 제도를 찾아 각 기관에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등 종합적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었음

□ 주요성과

- 불사금 피해자에게 신복위 전담자를 배정하여 불법추심 중단,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모든 피해구제 절차를 한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구축

* 1)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을 중단하도록 경고, 2)불법사금융 무효확인서 발급,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3)불법추심 지속시 경찰 연계 등

- 시행 이후 5월말까지 총 429명의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으며, 327명(2,391건)의 불사금 피해 신고·접수, 1,449건의 채무를 대상으로 불법추심 중단·채무종결 요구 → 385건 채무종결 합의

□ 국민체감효과

- 피해자가 혼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피해구제 체계와 신고 방법부터 피해구제까지 전담자의 밀착 지원으로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 불법사금융 상담과정에서 복합 지원제도(신복위 채무조정, 금융·고용·복지 지원)도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

3. 한성운 주무관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시스템 개발

□ 추진배경

- '24.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수행 필요
- 이를 위해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으나 제한적인 예산 상황을 고려해 직접 매매분석 시스템 개발

□ 주요성과

- (조사 성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법 시행 이후 총 28건의 사건을 검찰에 고발·통보
 - (조치사건 예시 ①) 고빈도 API를 활용하여 약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시세조종 사건의 혐의를 입증하여 검찰 고발 조치
 - (조치사건 예시 ②) 허수매수 등 대량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약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시세조종 사건의 혐의를 입증하여 검찰 통보 조치
- (예산 절감) 시스템을 직접 개발함에 따라 개발비용 약 9.32억원 절감
 - 또한 외부 업체를 통해 시스템 구축 시 매년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 연 1~2억원 절감

□ 국민체감효과

-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 가상자산시장의 질서 확립 및 투자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